

계단식 대피통로... 화재 땀 거동불편 환자 속수무책

광주북부소방서, 지역 노인요양병원 특별조사 동행취재해 보니

광주북부소방서가 지역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 29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H요양병원 5층 입원실. 광주일보는 이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노점래(여·50·소방경), 선계룡(45·소방장), 이태영(32·소방사)씨 등 3명이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 동행했다.

노 소방경 등 3명이 입원실에 들어서자, 스스로 걷기 힘든 중환자 5~6명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구석엔 피난 대피대가 설치돼 있었다. 노 소방경이 "피난 대피대가 지그재그로 설치돼 있느냐"고 묻자, 병원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벽면엔 피난안내도·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이 부착돼 있었다.

옆 입원실에선 선 소방장이 옥내화재전·비상 손전등 등 소방시설물을 살피고 있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기사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이유를 묻자, 선 소방장은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상(제22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 시설(아동·노인관련 집단 생활 시설) 등이다. 병원으로 구분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 소방경 등은 입원실을 확인한 뒤 대피통로 점검에 나섰다. 환자의 특성에 맞게 대피통로가 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비좁은 승강기 중환자 이동침상 못 들어가
- 계단식 대피 통로 휠체어 환자 신속 대피 못해
- 스프링클러 특정소방물 해당 안돼 미설치
- 입원실 피난대피대 지그재그로 제대로 설치

하기 위해서다. 너비 1.2~1.5m의 대피통로(대피 계단)는 경사도가 아닌 계단으로 돼 있었다. 대피통로 두 곳 중 한 곳은 휠체어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승강기도 침상이 아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았다. 이 병원 입원환자 180명 중 거동이 불편해 바퀴 달린 이동 침상에서 생활하는 중환자 수가 최소 4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환자의 특성에 맞는 경사도가 설치돼야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처럼 대부분 요양병원은 경사도가 아닌 계단식 대피통로로 인해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시설을



광주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직원들이 29일 광주 H요양병원 지하 1층 펌프실에서 스프링클러 압력탱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상(제33조) 요양병원은 입원실 30개 이상·급식시설·의무기록실·소독시설·진료실·자가발전시설 등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줄 수 있다. 선 소방장은 "이날 오전에 요양병원 세 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모두 계단식 대피

통로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초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승강기 설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램프형 계단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신설되는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병원들도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받지만, 예산부족 탓에 시설이 갖춰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이날 현재 ▲동구 4곳 ▲서구 4곳 ▲남구 7곳 ▲북구 10곳 ▲광산구 12곳 등이며 전남은 59 곳이다. /이종행기자 golee@

무안군청 비서실장 사무실서 뭉치돈

현금 900만원... 전남경찰청, 선거 관련·공사 뇌물 여부 조사

무안군청 비서실에서 수백만 원의 뭉치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돈이 군수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뇌물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비서실장 A(49)씨의 사무실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공사관련자제 및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한 자료를 무안군에 요청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감찰팀은 지난 20일 군 비서실과 A실장의 승용차에서 현금 900만 원을 발견한 뒤 A실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A실장 등을 불러 현금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실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이 군수 선거와 관련된 선거자금인지, 아니면 공사 수주 등 대가로 받은 뇌물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이번 선거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군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무안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다"며 "수사 착수단계인데다, 선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수사 후 중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대체 무슨 재판이길래...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을까

도대체 무슨 재판이길래, 수백 명이 탄 지하철에 불을 내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했을까.

서울 지하철 도곡역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71)씨는 광주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방화 사건을 저질렀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조씨와 광주시의 긴 소송은 지난 2005년 시작됐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A 보험사도 포함됐다.

조씨는 건물의 지하를 건물주로부터 빌려 2004년 4월부터 카바레를, 2007년 11월 카바레를 폐업한 뒤로는 콜라텍을 운영했다. 광주시는 이 건물 일부 소유주로, 해당 공간을 구경 사무실과 시립미술관이 사용토록 했다.

문제는 지난 2001년 5월께 건물 천장에서 인분이 섞인 오·폐수가 쏟아진

광주 지하 콜라텍 운영 70대 비만 오면 오페수 누수 피해 광주시 등 상대 세차회 손해배상 지난해 1심 8200만원 승소 항소심서 1000만원으로 판결 결과 불만 품고 방화

뒤 비만 오면 카바레로 종종 흘러내렸고 지난 2005년 3월에는 대량으로 흘러들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정화조, 맨홀, 배수관 등 배수시설을 공동으로 점유한 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2005년 10월 누수공사비, 조명기구·카바레 천장과 바닥 수리비, 영업이익 감소분 등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년 뒤 조씨는 일부 승소판결로 1800만원을 배상받

게 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누수로 조씨는 2억 2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11년 1월 21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콜라텍으로 오·폐수와 인분이 쏟아지는 일이 멈추질 않자, 조씨는 2012년 1억7500만원 상당의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21일 광주지법 1심 선고에서 그동안 인정액보다 훨씬 많은 8200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그러나 지난달 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장 적은 1000여만원을 시와 보험사로 하여금 조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조씨는 이후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대법원, 유죄 취지 환송

17명의 사상자가 난 여수 대림산업 화학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원정업체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53)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합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장성군수 후보 부인에 돈받고 외부에 알린 여성 검거 조사

검찰이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부인에게 돈을 받은 여성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종진 부장검사)는 29일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김 후보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A씨를 체포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납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거액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의 부인을 구속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음해하는 세력들의 뒷에 걸려든 것 같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부인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점을 일부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요구한 뒤 외부에 알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 30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5·18 '택배 모독' 일베회원 징역 구형

○5·18 민중항쟁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베리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

○2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5·18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양씨는 지난해 일베 사이트에 5·18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희생당한 아들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였다. 작별 이요'라는 설명까지 붙여서 게시해 고소를 당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커피숍" 매매

- 봉선동 한일병원 근처
- 1층 20평(실평), 최신 인테리어
- 보 2천만원에 월 90만원
- 비/권리금 4500만원
-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 문의 -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창가 코너
- 전체 울수리, 양동~하천쪽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
- 문의 - 010,3605,5000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초봉 200만원부터
여 : 초봉 150만원부터

사무, 입장 활동 및 기타